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경제안보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경제안보 현안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中 상무부, 군사사용자 및 군사 목적용 이중용도품목
對日 수출금지 발표
- 美 행정부, 국가안보 명분으로 中 통제 기업의 美 반도체
인수 거래 제동
- 트럼프 대통령, 이란 교역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25% 관세 부과 선언
- 중국 정부,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제한적 승인 전망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26-2호]

I. 경제안보 분석

유아름 전문관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01

1.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2. 미국 에너지 전략의 진화: 통제 가능한 자원 흐름 구축
3. 서반구 통제의 상징성과 미·중·러 전략 구도
4. 서반구 에너지 벨트와 글로벌 원유시장 질서의 재편
5. 평가와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안수린 전문관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15

1. 개요
2. 주요 성과
3. 평가 및 시사점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1. 개요
2. 주요 성과
3. 평가 및 시사점

III. 경제안보 현안

김단비 전문관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20

1. 중국의 對일본 수출통제 조치(1.6.) 주요 내용
2. 중국의 對일본 수출통제 조치 평가
3. 전망 및 시사점

V. EWS 공급망 / 에너지 동향

- 中 상무부, 군사사용자 및 군사 목적용 이중용도품목 對日 수출금지 발표
- 美 행정부, 국가안보 명분으로 中 통제 기업의 美 반도체 인수 거래 제동
- 트럼프 대통령, 이란 교역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25% 관세 부과 선언
- 중국 정부,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제한적 승인 전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전문관

요약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2026.1.3.)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및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

- ▶ 단순한 정권 교체나 제재 강화 조치를 넘어, 원유 생산·수출·판매수익 흐름을 미국이 직접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입 모델로 평가
- ▶ 특히 베네수엘라 사례는 자원 수익을 미국이 통제하는 계좌·금융 메커니즘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2025년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과 구조적 유사성이 관찰

■ 동 조치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서반구는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상징적·구조적 행동으로 해석 가능

- ▶ 일부 언론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중국의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나,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의존도는 1% 미만으로 제한적
- ▶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기점으로 가이아나·브라질 등 중남미 신규 산유국을 연결하는 서반구 에너지 벨트를 미국 주도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산유국 중심의 OPEC+가 주도해 온 국제 유가 조절력에 대한 대안적 축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관찰

■ 중국은 강한 반발을 보인 반면 러시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절제, 이는 미·중·러 간 영향권 분화(서반구-대만해협-우크라이나)가 강화되는 신호로도 해석 가능

- ▶ 중국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강한 외교적 반발을 보였으나, 이는 에너지 수급 문제라기 보다는 중남미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 가능

■ 금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단기 유가 변동보다 글로벌 원유 시장 구조와 에너지 안보 질서에 중장기적 함의를 지니는 사례로 평가

-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증산에는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인프라·부파·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美 석유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한계를 노정
- ▶ 美 주도의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수동적 추종이 아닌 핵심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참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1.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2026.1.3.)하고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운영 및 수익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

- ▶ 미국은 2017년부터 베네수엘라에 금융·석유산업 제재를 해 왔으나, 2026년 마두로 대통령 체포 및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통제를 통해 기존 제재 외교를 넘어선 직접 개입을 단행
- ▶ 마두로 축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트 美 에너지부 장관은 美기업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를 촉구하고,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수입은 미국이 관리할 것이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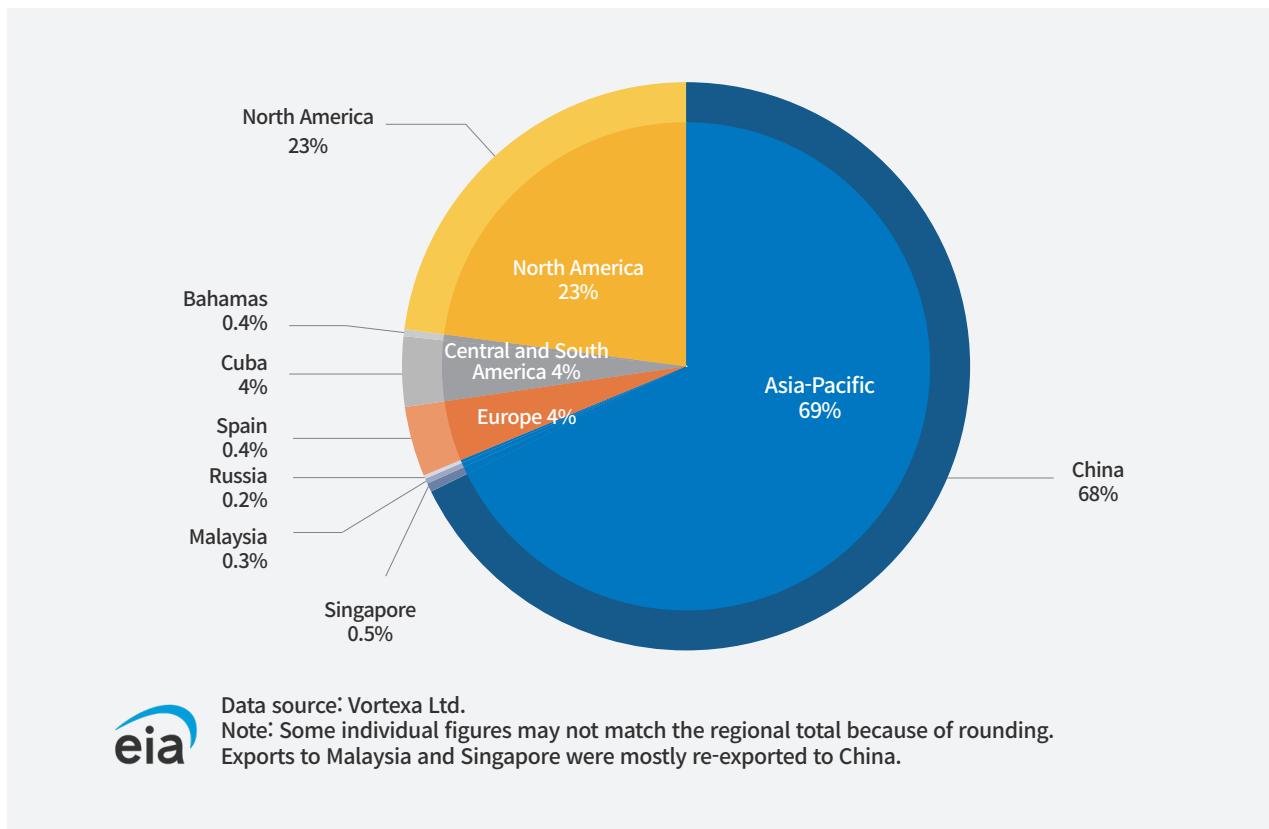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 타임라인>

- (2025.12월)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운송하는 불법 유조선단을 추적·나포 시작
- (2026.1.3.) 미군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 (2026.1.6.)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대상 원유 3천만~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석유 판매수익은 미국이 관리하겠다고 트루스 소셜(SNS)에 언급 ▲크리스 라이트 美 에너지부장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를 위한 비공개 투자자 회의를 진행
- (2026.1.7.) ▲라이트 장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무기한(indefinitely) 통제하고, 수익금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석유 수익 흐름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공식화, 또한 기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수익금으로 오직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 언급
- (2026.1.9.) ▲트럼프 대통령, 루비오 美 국무장관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에너지 기업 임원들과 베네수엘라 투자에 대한 회담을 진행, 그러나 거대 석유기업들(엑손모빌, 코노필립스 등)은 베네수엘라 투자에 앞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법적·재정적 보증을 요구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
- (2026.1.14.) 라이트 장관,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워싱턴 간 약 5억 달러 규모의 첫 원유 판매를 완료했다고 발표, 판매 수익금은 카타르에 있는 미 정부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미국 은행을 통해 운용할 것이라 부연
- (2026.1.16.) 라이트 장관, 美 석유기업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를 판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 이에 미국은 배럴당 45달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판매 가능하며 이는 브렌트유 평균 가격 보다 배럴당 15달러가 할인된 가격이라고 강조

- ▶ 미군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시장에서 글로벌 유가는 제한적으로 반응한 반면, 베네수엘라 중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미국 정유사들의 주가는 상승
 - 미국의 마두로 체포 직후,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0.4% 하락한 배럴당 60.43달러, 미국 원유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0.9% 하락한 배럴당 56.64달러를 기록
 - 반면,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 정유시설을 보유한 美 정유사 Valero 등의 주가는 3.1% 상승

- ▶ 글로벌 유가의 제한적 반응 배경에는 ▲현재 글로벌 유가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이며 ▲베네수엘라의 실제 생산량이 하루 백만 배럴에 못 미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반영
 - 다만,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이 정리되고 외국(미국) 자본 유입으로 원유 생산이 재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는 추가 공급이 기대되어 오히려 유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 (아르네 로만 라스무센 수석 애널리스트)
 - ▶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배경 관련 미측의 공식입장은 베네수엘라 마약 근절이나, 다수의 언론 및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을 통한 美 국내 문제 해결(이민자, 인플레이션) 및 ▲중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 견제를 지적
 -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발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원유 증산을 통해 국제 유가를 인하해 미국 내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인상 통제 효과를 기대 (이효영, 2025)
 - 중국은 2023년 기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등* 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지속 강화(그림 1 참조)
- * EIA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68%는 중국으로 가나, 중국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된 베네수엘라 원유를 우회 수입해 실제로는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 1]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대상국(2023년 기준)



자료: EIA(2024)

■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과거의 제재 외교 압박과 달리, 군사개입 → 정권 축출 → 핵심 산업(석유) 개입이라는 일련의 단계적 조치를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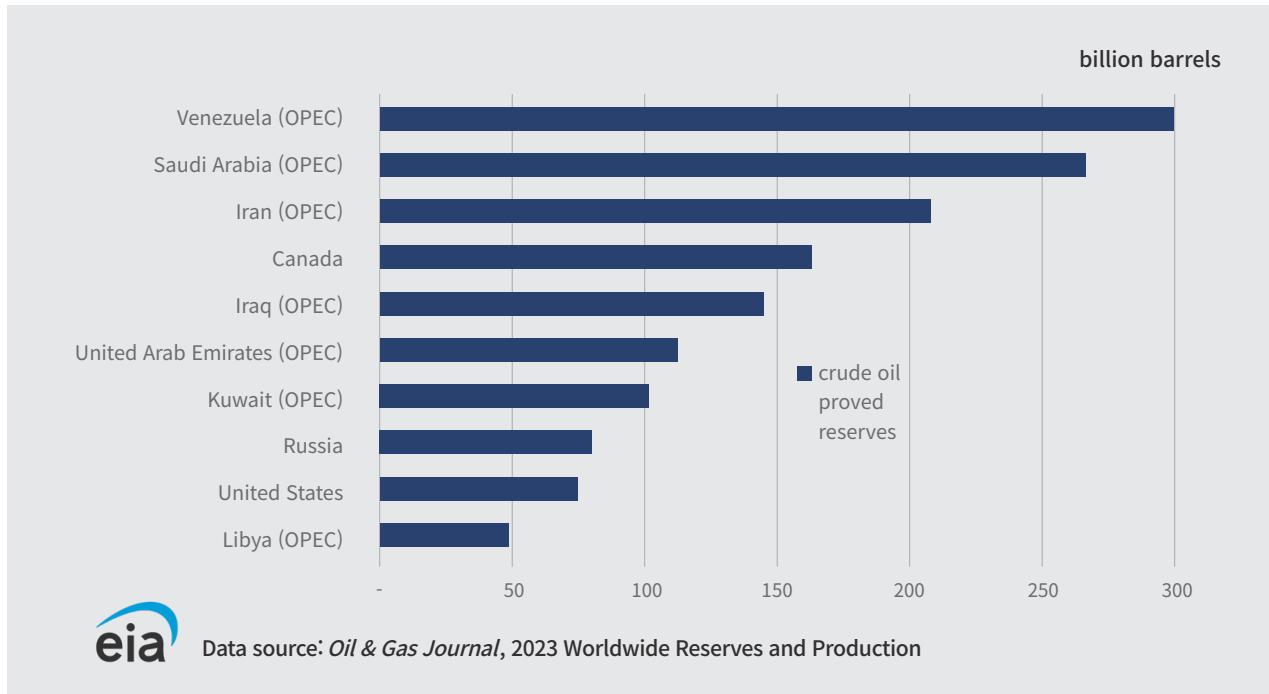
- ▶ 이는 단순히 마두로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이나 인권, 마약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 어려우며, 에너지·안보·지정학이 결합된 구조적 개입으로 이해할 필요
- ▶ 특히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 ▲서반구 내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 ▲중국·러시아가 장기간 중남미 진출 발판으로 관여해온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국가로 평가
- ▶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관련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국제 유가 인하 목적 ▲중국·러시아 경제 목적은 분명 중요한 배경이나, 이 두 요소만으로는 미국이 감수한 정치·군사·외교적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특히, 베네수엘라가 생산시설 노후화 등으로 단기 증산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이 굳이 고위험 개입을 선택한 점은 보다 장기적·구조적 목표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
- ▶ 이에 동 보고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사건(event)이 아닌 질서(order) 전환 신호로 보고, 에너지 관점에서 전략적 함의를 분석

2. 미국 에너지 전략의 진화: 통제 가능한 자원 흐름 구축

■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3,030억 배럴, 그림 2)이나 미국발 2017년 금융제재·2019년 석유 제재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340만 배럴(1990s)에서 약 100만 배럴로 급감[그림 3 참조], 현재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를 차지

- ▶ 베네수엘라 무역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의존도는 약 95%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제유가변동에 취약하며, 2006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국가재정이 악화(양의석 외, 2017)
 - * 베네수엘라 재정균형을 위한 유가는 배럴당 182달러로 평가(양의석 외, 2017), 현재 유가는 58달러(WTI, 2026.1월)
- ▶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은 국영기업인 PDVSA(Petroleos de Venezuela)*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정치개입, 인력 유출, 부패, 투자 부족 등으로 기술·운영 역량이 크게 악화
 - 특히 2006년 이후 저유가, 2017년 이후 강화된 미국의 제재(▲PDVSA의 국제 금융 접근 차단 및 원유 수출·결제 제약 ▲미국산 희석제 및 부품 수입 중단 ▲美 정유사로의 수출 감소 등)로 베네수엘라 정유·수출 인프라 등이 붕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
 - * 1976년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며 국영석유회사인 PDVSA를 설립, 2024년 기준 PDVSA는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의 90% 이상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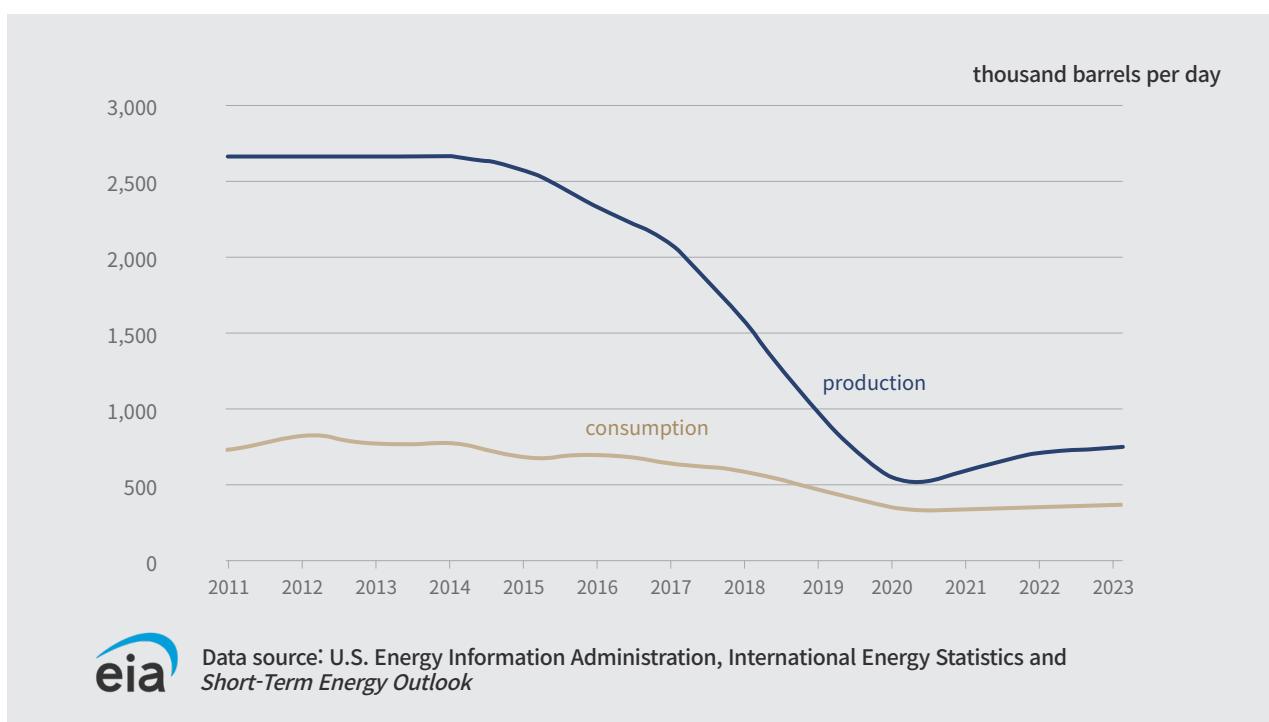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원유 매장량



자료: EIA(2024)

- ※ ▲(글로벌 원유 매장량 순위) ①베네수엘라 (3,030억 배럴) ②사우디아라비아 (2,670억 배럴) ③이란(2,080억 배럴)
④캐나다 (1,640억 배럴) ⑤이라크 (1,450억 배럴) (IEA, 2024)
- ※ ▲(글로벌 원유 생산량 순위/일(bpd)) ①미국 (13.2~20.1백만 배럴) ②러시아 (10.2~10.8백만 배럴) ③사우디아라비아
(9.2~10.9백만 배럴) ④캐나다 (5.1~5.9백만 배럴) ⑤이란 (5.1백만 배럴) (IEA, 2024)

[그림 3]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2011-2023년)



자료: EIA(2024)

- ▶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엑손모빌(美), 코노필립스(美) 등은 2007년 차베스(Hugo Chavez)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의해 자산을 몰수당한 뒤 철수, 이후 특별 허가(license)를 받은 일부 美 기업만(셰브론)이 제한적 생산(하루 약 10만 배럴) 및 수출을 지속*

*▲ 베네수엘라 생산시설 완전 붕괴 방지 ▲ 美 정유사의 최소한의 중질유 확보라는 상호 필요성(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 대부분은 경질유)에 기반해 미국-베네수엘라 정부 허가

■ 美 제재 이후로 중국, 러시아가 주요 원유 구매자 및 금융 파트너로 부상

- ▶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질유(heavy crude oil)로 무겁고 불순물이 많아* 복잡한 정유 공정이 필요, 원유를 가볍게 만드는 희석제(나프타 등) 없이는 수출·정제가 어려워 미국산 희석제 수입 및 미국·중국 등 특정 정유 인프라에 의존

* 원유의 품질은 비중과 황(Sulfur) 함량으로 분류하는데, 베네수엘라 원유는 비중이 높고(API=8) 황 함유량이 많아 매장량이 많아도 품질이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유(WTI) 등 보다 낮음

- 제재로 美 나프타 등 희석제 수입이 제한되자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난항에 봉착 → 중국이 베네수엘라 중질유 정유·가공 대체자로 부상

- ▶ 중국의 경우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원유를 부채 상환(oil-for-loans) 형태로 수입했으나, 베네수엘라는 현금 수입이 제한되어 PDVSA 재정 개선 효과는 제한적

■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에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美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원유 판매 및 수익금을 미국이 직접 관리

- ▶ 미국은 ▲기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를 유지하되 美 석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낙후된 생산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량을 확대하고 ▲원유 판매대금을 베네수엘라 정부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이 관리 감독하는 금융 메커니즘에 귀속

- 자원 수익을 미국 관리·감독하에 두는 정치적 제도적 관리 가능성은 실험하는 성격을 노정

- ▶ 이는 최근 미국의 에너지·자원 정책에서 관찰되는 다음과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음

-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전통적 시장재가 아닌 전략 자산으로 인식

- 시장원리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기보다, 에너지 산업 전주기 생산·유통(정유 포함)·금융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 이는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심광물 정책과도 유사*

* 백악관은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에 가공된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CMDPs*)의 미국 수입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지시하는 팩트시트를 발표(2026.1.14.), 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채굴을 넘어 가공(processing)과 파생제품(derivative) 생산역량 부족까지 지적하며 핵심광물 전주기 공급망 구축을 통한 높은 수입의존도 축소를 목표

- 제재, 안보, 재건, 산업정책과 결합된 자원 관리 모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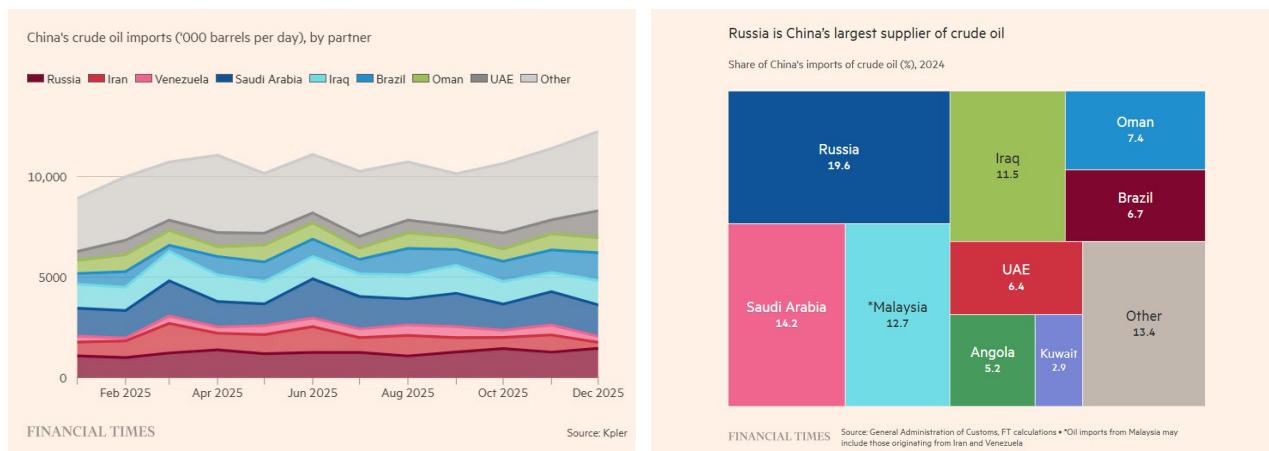
- ▶ 이러한 접근은 2025년 美-우크라이나 광물협정에서 나타난 ▲자원 수익의 미-우크라이나 공동펀드 귀속 ▲대외적 재건·안보 목적 활용이라는 구조와도 연속성을 가짐

- 베네수엘라 사례는 미국이 공급망 전주기를 통제하는 모델이 핵심광물 영역을 넘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가능

3. 서반구 통제의 상징성과 미·중·러 전략 구도

- **중국은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중국의 원유 수급국이자 중남미 발판으로 영향력을 확대**
 - ▶ 중국은 지난 25년간 베네수엘라에 천 억달러 이상을 차관해 주고, 2025년 마두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전천후 우호 관계 (all-weather partnership)”으로 격상
- **일부 언론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중국의 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나,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의존도는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단기적 에너지 수급 타격은 크지 않음(그림 4 참조)**
 - ▶ 중국은 원유소비량의 약 73.9%를 해외 수입에 의존(2023년 기준, EIA),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 (19.6%), 사우디아라비아(14.2%)이며 이중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 중국 원유수입 순위 (2024년 기준): ① 러시아(19.6%) ②사우디아라비아(14.2%) ③말레이시아(12.7%) ④이라크(11.5%) ⑤오만(7.4%) ⑥브라질(6.7%) ⑦UAE(6.4%) / 베네수엘라·이란 원유는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재수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 (FT, 2026.1.8., 중국세관통계)
 - 중국은 미국의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비율을 축소, 그러나 중국 정유사들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물론 제재 대상인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속
 - 중국의 원유 수입의존도는 중동에 치우쳐져 있으며(약 45% 이상), 베네수엘라 급변사태 보다 이란 등 중동 지역 리스크 발생이 중국 에너지 수급에 실질적 타격 가능*
 - * 중국에게 이란은 베네수엘라보다 ▲에너지 수급 ▲해운·물류 병목(호르무즈 해협 등)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3배 증가한 하루 140만배럴에 상당, 이는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량의 13%를 차지
 - ▶ 베네수엘라와 같은 제재를 받는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할인된 원유를 구매해 온 중국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나(WSJ, 2026.1.17.), 그동안 중국은 산업적 필요보다 비축분 확보를 위해 글로벌 원유시장 과잉 공급분을 일부 흡수해 왔던 경향이 있어 단기간 중국 에너지 수급에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중국의 원유 수입



자료: Financial Times

■ 오히려 본 사안의 핵심은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을 명확히 하고, 중국의 서반구 진출 한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데 있다고 분석 가능

- ▶ 미국은 작년 12월 발표한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에서 에너지 지배력 확보 및 서반구에 대한 미국 우위 확보를 강조
 - 5대 우선순위 중 하나로 경제안보를 제시하고 공급망 확보 및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및 수출확대를 강조, 또한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서반구 내 군사배치 및 전략 자산을 소유·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천명(이재원, 2026)
- ▶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원유 공급국이 아니라 ▲중남미 진출의 거점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자원·금융·외교 협력의 상징적 파트너였다는 점에서 정치·전략적 손실 다다
 - 마두로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지도자로,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을 보유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
- ▶ 중국은 중남미에 진출하여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대두·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대량 구매, 또한 구리·리튬 등 광물산업에 투자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1년 동안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목도
 - 멕시코는 최근 미국과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50% 관세를 부과, 파나마는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고 파나마 운하 인근기지에 미군 순환 주둔을 허용

[그림 5] 중국의 중남미 진출 현황



자료: Wall Street Journal (2026.1.13.)

- ▶ 중국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강한 외교적 반발을 보였으나, 이는 에너지 수급 문제라기 보다는 지정학적 영향력 축소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 가능
 -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자 중국은 2025.12월 중남미 정책문서를 발표*, 이는 향후 대만 문제에 대해 워싱턴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WSJ, 2026.1.17.)
 - *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중시하는 고립주의적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자(2025.12.5.) 중남미와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을 담은 정책문서(「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 2025.12.10.)를 발표
 - 시진핑 주석이 파견한 추샤오치 중국 특사가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직후 美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이로써 서반구에 대한 중국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중국은 트럼프의 서반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 한편,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이 오히려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호재라는 분석도 존재
 -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 중국 담당관을 지낸 라이언 하스(Ryan Hass)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가 아닌 중남미에 집중되는 것과 ▲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베네수엘라 석유 증산 또한 시장 공급 확대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며 ▲ 특히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NYT, 2026.1.5.)
 - 미국의 마두로 체포 직후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중질유를 90%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캐나다산 중질유 판매를 포함한 에너지 협력에 합의(2026.1.16.)

■ 반면, 러시아의 반응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수준으로 관찰

- ▶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2026.1.5.)에서 중국과 함께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규탄했으나, 비판 수위는 중국보다 한 층 낮은 수위로 비판
 -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타스 통신(TASS)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이 “미국의 정치적 이익(중남미가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점)과 경제적 이익(석유 및 기타자원) 모두에서 자국의 국익을 확고하게 수호해 왔다”고 평가, 또한 금번 미국의 행동으로 “(미국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러시아를 비난할 근거가 없다”고 언급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1년 NATO의 리비아 공습 및 카다피 국가원수를 제거했을 때 높은 수위의 비판을 한 것과 달리, 2026년 마두로 베네수엘라 축출에는 침묵을 유지
- ▶ 이는 러시아가 전략적 역량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전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반구에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려는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 가능
 - 러시아는 2018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고, 2025년 10월 베네수엘라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비준하며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진출 발판으로 삼으려 했음

-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서반구 지배권을 내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 베네수엘라 관련 침묵을 지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 (NYT, 2026.1.5.)
- 한편, 중국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사전에 몰랐던 반면, 러시아는 12월 말부터 외교관 가족들의 조용한 대피를 시작, WSJ 보도에 따르면 대피 관련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모스크바가 중국 측에 계획을 미전달(WSJ, 2026.1.17.)

■ 중국과 러시아 반응을 통해 서반구는 미국, 대만해협은 중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라는 영향권 분화가 더욱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 ▶ 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서반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는 서반구가 미국의 것이 된다면 대만해협은 중국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 주제 변화가 관찰
- ▶ 퉁 자오(Tong Zhao)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트럼프를 조종하여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

4. 서반구 에너지 벨트와 글로벌 원유시장 질서의 재편

■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일 국가에 대한 조치라기 보다, 중남미 에너지 지형 및 글로벌 원유시장 전반을 재편하려는 장기 전략의 출발점으로 해석 가능

- ▶ 베네수엘라 인접국인 가이아나와 브라질은 ▲최근 대규모 유전 개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 ▲비OPEC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의 핵심 축으로 부상
 - 최근 심해 유전 개발에 성공한 브라질은 남미 지역의 주요 산유국으로 부상, OPEC+ 감산 기조 속에서도 브라질은 생산량(하루 3.2~3.5백만 배럴)을 늘리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중
 - 또한 최근 유전이 발견된 가이아나의 경우 베네수엘라 인접국으로 엑손모빌 등 많은 美 석유 기업이 진출해 일일 생산량 77만 배럴을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일일 생산량 130만 배럴이 넘을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 에너지컨설팅업체 Rystad Energy는 남미(브라질, 가이아나, 아르헨티나)가 2030년대 비OPEC+ 석유시장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할 것이라 지적하며, 비OPEC+ 신규 석유 생산 능력은 2030년까지 하루 590만 배럴 중 60% 이상이 남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기점으로 가이아나, 브라질을 연결하는 서반구 에너지 벨트를 관리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해 온 OPEC+의 감산·증산을 통한 공급 중심 유가 통제 구조에 대안축을 형성하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 현 베네수엘라의(원유 생산량 세계시장 비중1%) 국제 유가 영향력은 작으나, 중장기적으로
 - ▲생산 회복 ▲가이아나*·브라질 등 비OPEC+국의 증산 ▲美 주도의 공급 확대로 인해 OPEC+의 유가 조절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

* 2015년 심해유전 발견, 엑손모빌(美) 주도로 일일 생산량 약 70만 배럴, 남미 2위 산유국으로 부상

- OPEC+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유가는 배럴당 40\$까지 하락했으나, 사우디·러시아의 감산 정책으로 60\$로 상승

-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에너지 가격 안정·저유가 유지(배럴당 40\$) → ▲인플레이션 억제 →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년간 OPEC 회원국인 이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무역을 미국의 조건에 맞춰 재편하려는 의지를 노정노정(Bill Farren-Price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선임연구원)

5. 평가와 시사점

■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직접 개입은 ▲통제 가능한 자원 흐름 구축과 ▲서반구 영향력 확보라는 두 축에서 해석 가능

- ▶ 이는 중국을 특정해 에너지 시장에서 타격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 글로벌 에너지 질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메시지를 담은 행동으로 평가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석유 채굴사업에 방해가 되는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석유 산업 부흥을 통한 정책을 펼쳤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서반구 원유 공급망 전주기 확보를 통해 통제 가능한 자원 흐름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원유 증산으로 OPEC+를 견제 가능한 글로벌 유가에 대한 통제력 확보 시도로 해석 가능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 증산에는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인프라·부패·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美 석유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한계를 노정

- ▶ 트럼프 대통령은 美 석유업계 대표들을 초청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2026.1.9.), 엑손모빌을 포함한 美 석유 업계 대표들은 베네수엘라의 ▲ 인프라 붕괴 ▲법·계약 불확실성 ▲치안·제재 리스크 ▲10년 이상 걸리는 회수기간 등을 우려하며 베네수엘라 전면 투자에 대해 조건부 및 신중한 입장을 유지

- 천 억 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부담과 과거 차베스 전 대통령에 의한 자산 압수 경험(2007년) 등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재정적 보장 없이 베네수엘라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 반면, 이란 석유 산업에 대한 美 석유 업계의 관심은 적극적, 석유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 마이크 소머스 회장은 “이란 정권 붕괴 시 이란에서 안정화 세력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Politico, 2026.1.14.)*

* 이란은 약 47년 동안의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은 비교적 건전한 상태를 유지 중 / 美 석유업계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 정권교체 시 이란 석유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은 풍부하나 산업 기반은 붕괴된 상태로 실질적 생산을 위해 EIA는 단기적으로 ▲제재 완화 ▲외국 기업 참여 확대 ▲희석제 및 기술부품 접근 허용,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혁 ▲PDVSA 구조조정 ▲외국자본·기술 복귀를 권고

■ 금번 사례는 향후 에너지·자원이 시장 논리뿐 아니라 지정학적 논리에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지속적인 정책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

- ▶ 美 주도의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비산유국이자 에너지 전량 수입국인 한국은 수동적 추종이 아닌 핵심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참여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참고문헌

- 하이케 부흐터(2019). 석유전쟁. 윤리시즈.
- 오정석(2025). 강대국은 어떻게 미래를 확보하는가: 한눈에 보는 원자재 패권지도. 한빛비즈.
- 배진영, 라병호(2025). 진짜 하루만에 이해하는 정유·석유화학 산업. TWIG.
- 김태균(2026.1.12.). “흔들리는 OPEC...트럼프, ‘세계 석유 지도’ 다시 그리나”. 연합뉴스.
- 김현철(2026.1.4.). “마두로 체포에도 국제유가 충격 제한적 전망...공급과잉 속 단기 영향 미미”. 글로벌이코노믹.
- 김현철(2026.1.8.). “트럼프 행정부” 미,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직접 통제 “...대금으로 경제 재건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 양의석, 김아름, 김비아, 김은진(2027.3.13.).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상황과 석유부문 요인 분석”.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8호.
- 이재원(2026.1.9.).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Review 26-1호.
- 이효영(2026.1.8.).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의 의도와 에너지 패권 강화 전략”. IFANCS Focus 2026-04K.
- 조남준(2025.11.11.). “브라질,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비OPEC 석유공급 신 3대축 부상”. 에너지데일리.
- 조일현, 조상민, 김창훈 외(2025.1.20.). “트럼프 재집권기의 에너지시장 영향과 대응방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5-1호.
- 차병섭(2025.12.10.). “美, 서반구 중시 발표에...中 중남미와 운명공동체 건설”. 연합뉴스.
- 키쓰 리(2026.1.15.). “베네수엘라 오일 산업의 기술적 현실”. 기후에너지경제.
- 홍정규(2026.1.19.). “美 마두로 축출 나비효과? 원유수입·수출타격 中·캐나다 손잡아”. 연합뉴스.
- KBR경영연구소(2025.7.30.). “글로벌 석유시장의 지각 변동: 주요 산유국 순위와 동향 분석”. Korea Business Review.
- Anderson, Scott R., and Saraj A. Binder et al., (2026.1.7.). “The global implications of the US military operation in Venezuela”. Brookings Institute.
- Boussou, Ron.(2026.1.5.). “US oil refiners win, Chinese rivals lose in Trump’s Venexuela strike”. Reuters.
- Bikales, James.(2026.1.13.). “US oil producers pledge to help stabilize Iran if regime falls”. Politico.
- Eaton, Collin., and Paul Vieira.(2026.1.17.). “U.S. blockade shuts off China, Cuba from Venexuelan Oil”. Wall Street Journal.
- Falakhashi, Homayoun.(2026.1.5.). “Maduro captured: Venexuela’s oil future at a crossroads”. Kpler.
- Haigh, Michael.(2026.1.7.). “Venezuela: Oil, oil everywhere – but not a drop to pump”. Financial Times.
- Khan, Shariq.(2026.1.10.). “Trifigura, Vitol agree to help sell Venezuelan oil on US government request”. Reuters.
- Leahy, Joe., Malcolm Moore(2026.1.8.). “Donald Trump’s Venezuela action raises threat for China’s oil supplies”. Financial Times.
- McComick, Myles., and Jamie Smyth(2026.1.4.). “Washington plans to put oil at heart of Venezuela’s future”. Financial Times.

- McComick, Myles., and Jamie Smyth(2026.1.8.). “Washington seeks to control sales of Venezuelan oil ‘indefinitely’”. *Financial Times*.
- McComick, Myles., and Jamie Smyth(2026.1.8.). “US oil groups warn they will need guarantees to invest in Venezuela”. *Financial Times*.
- Munir, Martha., and Jamie Smyth, Malcolm Moore(2026.1.7.). “Donald Trump says US to take sanctioned Venezuelan oil to American ports”. *Financial Times*.
- Reed, Stanley.(2026.1.13.). “Venezuela’s oil riches are years off, but winners and losers will emerge”. *New York Times*.
- Renshaw, Jarrett.(2026.1.15.). “US completes first Venezuelan oil sales valued at \$500 million, US official says”. *Reuters*.
- Setser, Brad. (2026.1.8.). “Increasing Venezuela’s oil output will take several years – and billions of dolla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 Smyth, Jamie., and Steff Chavez(2026.1.10.). “Donald Trump threatens to block Exxon Mobile from Venezuela”. *Financial Times*.
- Troianovski, Anton.(2026.1.5.). “Trump’s foray into Venezuela could Embolden Russia’s and China’s own aggression.” *New York Times*.
- Volcovici, Valerie.(2026.1.17.). “US moving fast to expand Chevron’s Venezuela license, Energy Secretary Wright tells Reuters”. *Reuters*.
- Wallace, Joe., Costas Paris and Rebecca Feng.(2026.1.17.). “The tanker tycoons and oil brokers cashing in on the Venezuela trade”. *Wall Street Journal*.
- Wei, Lingling.(2026.1.13.). “U.S. blows up China’s Latin America ambitions with Maduro ouster”. *Wall Street Journal*.
- EIA (2024.2.8.), “Country Analysis Brief: Venezuela”. *EIA*.
- Reuters (2024.5.24.). “What is OPEC+ and how does it affect oil prices?”. *Reuters*.

[웹사이트]

- EIA (<https://eia.gov/>).

저자 소개

유아름 |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 『주요국(美·EU·中·日)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경제안보리뷰 24-1호(2024),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리뷰 24-16호(2024),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경제안보리뷰 25-7호(2025) 등이 있다.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전문관

1. 개요

■ 韓中 양국 정상들은 ‘26.1.5일 회담 계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민생·평화 중심의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를 논의’

- ▶ 9년 만에 성사된 금번 중국 국빈 방문은 한·중 간 관계 복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은 수직적 분업 위주의 기존 협력 구조를 넘어 소비재, 서비스, 콘텐츠 등으로 협력 영역을 다변화 등 입체적인 미래 지향적 협력 체계 구축에 공감
- ▶ 민생·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14건^{*}의 MOU를 체결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 ▲아동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 ▲환경 및 기후 협력
▲디지털 기술 협력 ▲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상무 협력 대화 신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식품안전 협력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수출입동식물 검역 분야 협력

※ 「한-중 비즈니스 포럼」 계기 양국 기업 간 총 9건의 MOU 체결(소비재 4건, 콘텐츠 3건, 공급망 2건)¹⁾

2. 주요 성과 ※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26.1.5.) 및 QnA 기반 작성

▶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

-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속 한중 간 공급망 안정 필요성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 형성
-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 구조를 고려한 협력 관리 필요성 재확인
- 수출통제·경제안보 이슈로 인한 오해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소통 채널 유지 의지 표명
- 기존 경제협력 프레임을 넘어 ’안정성·예측 가능성‘ 중심의 경제관계 관리 기조 확인

¹⁾ MOU 구체 내용 산업부 보도자료(‘26.1.5.) 참조 / 정책실장은 32건으로 언급(대한상의 보도자료, 1.6)

▶ (통상·투자 환경 개선 및 기업 애로 해소)

-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에 대한 고위급 차원의 문제 인식 공유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해소 필요성 합의
- 한중 FTA 후속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투자·통관·인허가 분야에서의 제도적 투명성 제고 필요성 재확인

▶ (신사업·미래 협력 분야 논의 확대)

-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탄소중립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논의
-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여지 확인
- 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의 분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기존 제조업 중심 협력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협력으로의 전환 가능성 확인

▶ (다자역내 협력 틀 내 한중 협력 지속 의지 확인)

- RCEP 등 역내 다자 협력체를 통한 통상 협력 지속 의지 확인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자유무역 질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입장 공유
- 역내 경제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한중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 재확인

3. 평가 및 시사점

■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공급망·통상 협력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한 관계 관리형 정상외교로 평가

- ▶ 구체 협력 확대보다는 기업 활동통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안보 이슈의 외교적 충돌을 사전 차단하는 데 정책적 의의
- 향후 한중 경제관계가 확대 국면에서 관리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공식화한 정상 차원의 신호로 해석 가능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26.1.14.) 및 한일 공동언론발표문(1.13.) 기반 작성

1. 개요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을 통해 한일 협력의 제도적 안착을 재확인하고, 경제·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의 구조적 심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 ▶ 특히 금번 회담은 한중 정상회담과 달리, 구조적·제도적 협력이 가능한 경제 파트너십 심화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

2. 주요 성과

- ▶ (경제안보·통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틀 구축)
 - 국제정세와 통상질서 급변 및 기술혁신에 의한 삶 변화에 대한 공동 인식 형성
 -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의 포괄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개시 합의
 - 정상 간 공급망 협력에 대한 의지 표명 등 공급망 협력 제고 차원의 진전 도출
- ▶ (통상·시장 접근성 관련 논의 진전)
 - 한국의 CPTPP 가입 의지 재확인 및 양측 간 긍정적 논의 진행
 - 일본산 식품 안전에 대해 일측 입장 확인
- ▶ (AI·지식재산보호 분야 협력 강화)
 - AI·지식재산보호 협력 심화를 위한 실무협의 지속에 합의
 -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 강화 필요성 공감
 -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 강화
- ▶ (민생·사회·경제 영역 협력 확대)
 - 지방성장 등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실질적 성과 도출 가속화 합의
 -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통해 국민 체감형 협력 강화
 - 출입국 간소화·수학여행 장려·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등 인적교류 확대 제안

3. 평가 및 시사점

■ (한일 정상회담) 공급망·통상·기술 등 구조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관계를 ‘관리’에서 ‘심화’단계로 이동시킨 정상외교로 평가

- ▶ 한중 정상회담이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과 달리, 한일 회담은 제도·규범·정책 조율을 통한 중장기 협력 구조 구축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 존재
 - 우리 경제가 미중 경쟁 속에서도 신뢰 기반 경제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축 하나를 확보했음을 시사

참고문헌

- 대통령비서실. (2026.1.5.). 중국 국빈 방문 경제 협력 성과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EmqwAWT6>
- 대통령비서실. (2026.1.14.). 한일 정상회담 및 주요 성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w6QbZeJk>
- 대통령실 (2026, 1. 13.) 한일 공동언론발표문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pVudVwDr>
- 동아일보. (2026.1.14.). 靑 “한일 정상, CPTPP 긍정 논의…日, 수산물 안전 설명”.
<https://faq.donga.com/NEWS/Politics/3/all/20260114/133154832/2>
- 서울경제. (2026.1.14.). 韓 의사 재확인, 日은 수산물 안전 설명…CPTPP 가입 물꼬.
<https://www.sedaily.com/NewsView/2K7AUGCQXN>
- 서울신문. (2026.1.14.). 협력 여지 큰 ‘조세이’부터… 양국 과거사 문제 첫발 뗐다.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6/01/14/20260114005003>
- 서울신문. (2026.1.15.). 한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 靑 “추가 실무협의 필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6/01/15/20260115004002>
- 아시아경제. (2026.1.15.). 전문가들 한중·한일 정상회담 긍정 평가…미·일, 李대통령 균형감에 '안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11509480517470>
- 파이낸셜뉴스. (2026.1.14.). 李대통령, 1박2일 일본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셔틀외교 공고화.
<https://www.fnnews.com/news/202601141950588265>
- Reuters. (2026.1.6.). China, South Korea to carry out cultural exchanges in orderly manner, Beijing say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outh-korea-carry-out-cultural-exchanges-orderly-manner-beijing-says-2026-01-06/>
-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1.6.). Li Qiang and Lee Jae Myung back free trade and multilateralism during Beijing talks. SCMP.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338952/li-qiang-and-lee-jae-myung-back-free-trade-and-multilateralism-during-beijing-talks>

저자 소개

안수린 | srann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기술 경쟁, 신흥 핵심기술, 수출통제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국의 대북제재 I & II편”, “엔비디아 AI 칩 중국 수출 재개 동향”(경제안보리뷰 25-16호), “미국의 중국산 드론 규제 동향”(경제안보리뷰 25-14호), “미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경제안보리뷰 25-10호), “오픈소스 하드웨어(RISC-V) 관련 동향”(경제안보리뷰 24-8호), “美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및 강화 조치”(경제안보리뷰 23-19호) 등이 있다.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1. 중국의 對일본 수출통제 조치(1.6) 주요 내용

■ (배경) 일본 총리의 대만 문제 발언(2025.11) 계기, 중일 관계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를 조치를 발표(1.6)

- ▶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발언(25.11.7.)한 이후 중국과 일본 간 외교 갈등이 급격히 고조
 - 중국은 일본 총리의 발언이 대만 사태 발생시 일본의 군사 개입 정당화를 위한 발언이며, 이를 중국의 주권 침해 및 무력 위협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
 - ▲중국 대형 여행사의 일본 여행 상품 판매 중지(25.11.15)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25.11.19) ▲중국 항공모함의 일본 오키나와 해역 항해(25.12.8) 등 중국측 보복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를 사유로 對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발표(26.1.6)

■ (주요 내용) 중국에서 수출되는 일본向 이중용도품목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군사 관련성이 있거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금지

- ▶ (조치 내용) 일본의 ▲군 사용자 ▲군사 용도 ▲군 역량에 도움이 될 경우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 (적용 품목) 드론, 고성능 센서, 반도체 소재, 특수 합금 및 중희토류 7종,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원자재 포함 846개 품목
 - (적용 대상 및 시행일) 중국 외 제3국(기업·개인)도 관련 법적 책임 추궁 가능 명시 / 유예 기간 없이 즉시 발효('26.1.6)
 - (허가 기준) ▲군사력 강화 기여 기준 ▲최종 수요자 범위 등 수출 허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未 언급

2. 중국의 對일본 수출통제 조치 평가

■ (평가) 중국의 이전 수출통제 조치 대비 통제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수출 허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 조치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多

- ▶ 중국은 일반적으로 특정 이중용도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이번 조치는 특정국을 명시하였으며, 통제 품목도 전체 이중용도품목(846개)을 대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
 - 중국은 이전에도 특정국(미국)을 겨냥한 수출 통제 조치('24.12.3)를 시행한바 있으나, 이번 조치는 제3국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도 법적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라는 불확실한 수출허가 기준을 제시

[최근 중국의 특정국 대상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조치]

대미 수출통제 조치('24.12.3)		대일 수출통제 조치('26.1.6)
사유	미국의 차별적 조치 (중국 반도체 기업 대상 제재 조치)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통제 대상 및 품목	① 미군 사용자 또는 군사 목적으로의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②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소재 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원칙적 수출금지 ③ 흑연 관련 제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① 일본 군사 사용자 또는 군용, <u>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타 최종사용자와 용도</u> 에 대해 모든 이중용도 품목(846개)의 수출금지 ②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기업·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에게 이전하는 경우 법적 책임 부과 가능
조치 특징	조치 발표 이후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소재 품목에 대한 對미국 수출통제 시행	

자료: 저자 작성

■ (對일본 영향) **對일본 통관 심사 강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제품 수입 지연 및 관련 통관 비용 증가 ▲희토류 수급 제한에 따른 핵심 산업 생산 차질 가능성 제기**

- ▶ (허가 기준의 불확실성) 이번 조치의 수출 허가 기준이 불확실하고, 통제 품목도 매우 광범위한바, ▲통관 서류 심사를 위한 기업 운영 비용 증가와 ▲관련 품목의 수입 지연 가능성 등 경영 불확실성 확대 전망
 - (수출심사 정보 요구 확대) 중국은 이번 조치 이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구매자, 최종용도, 운송 경로 및 재수출 목적지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심사 기간 증가가 전망(Rare Earth Exchanges, 26.1.19)
 - (희토류 자발적 판매 거부 및 중단)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영 공급업체들은 일본 기업들에게 희토류 관련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Kyodo New, 26.1.10)
- ▶ (희토류 공급망 타격) 2024년 기준 일본은 세계 최대 희토류 수입국으로 이번 조치의 장기화시 자동차, 항공, 정밀 화학 등 일본의 핵심 전략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일본 금속에너지안보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2024년 중국에서 71.9%의 희토류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어, 희토류 수입 불가 시 광범위한 산업 영향 우려
-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희토류 관련 3개월간의 공급 차질로 일본이 6,600억 엔의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Rare Earth Exchanges, 26.1.19)

■ (일본의 대응) ▲ 미국·G7과 협력 확대 ▲ 자체 비축 물량을 통한 단기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가속화 할 전망

- ▶ (G7 및 우방국 공조) 일본은 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관련 대응을 논의하는 등 관련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
 - ※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 측도 대미 정상외교 등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축소) 일본은 2026년 1월 미나미토리섬 인근 심해 희토류 채굴 시험 시행 등을 통해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완화 정책을 가속화 할 전망

3.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중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 감안시 양국 간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갈등 국면에 따라 중국측의 통제 강도가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

- ▶ 중국의 강경한 태도 고려 시 양국 간 갈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
 - (중국 입장) 중국 상무부는 정례 브리핑(26.1.15)을 통해, 대일본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유지
 - 중국측이 일본에 조치를 시행한 원인은 일본측이 ▲대만 문제 관련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고, 중국 내정에 공개 개입 ▲‘안보 3문서’ 개정* 등 재군사화 추진 ▲‘비핵 3원칙’ 수정을 추진**하고 고위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핵 보유 발언을 한데 있으며,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중국 상무부, ‘26.1.15’)
 - * 일본 정부는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개정을 추진 중 / 다카이치 총리는 25.10월 국회연설에서 내년 중 개정 방침 언급
 - **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후 2025년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60년간 이어온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시사
- ▶ 향후 양국 갈등 수위에 따라, 중국 당국이 수출 허가 대상 품목 등 수출통제 조치의 실질적인 집행 수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전망
 - 향후 ▲희토류 전면 수출통제 시행 ▲실질 통제 대상 품목 확대(846개 이중용도 품목 중 특정 품목 수출제한 등) ▲수출허가 절차 강화 등 중국측의 통제 강도가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는 불확실성 지속

■ (시사점) ▲ 일본의 대응 동향 ▲ 중일 간 갈등 고조에 따른 중국의 수출통제 집행 동향 변화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 (단기 영향력) 일본은 희토류 관련 ▲ 자체 비축 물량 ▲ 제3국 우회 수입 등을 통해 수출통제에 따른 수급 부족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통제 대상 이중용도품목(846개) 전반에 대한 수출제한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며, 일부 중국 기업의 자발적 대일본 희토류 수출중단 및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지연 등이 관찰
 - 단, 중일 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통제 품목 대폭 확대, 희토류 전면 수출통제, 제3국 우회 수출규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은 지속될 전망
- ▶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사태 장기화 ▲ 중국의 실질 집행 동향 변화 등에 따른 공급망 내 영향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중국의 수출통제는 상대국과 협상 국면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되는바, 수출통제 조치의 실질 집행 동향과 중일 관계 변화 등을 관찰하며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중국의 ▲수출허가 절차 강화 ▲수출 통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핵심광물 비축량, 대체 수입선을 검토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최종사용자 인증 절차를 사전 점검할 필요

참고문헌

- 商务部(2026. 1. 6.). “商务部公告2026年第1号 关于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的公告”.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8990feda8fa462eb02cc9bae5034e91.html
- 商务部(2026. 1. 6.). “商务部新闻发言人就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答记者问.”
https://www.mofcom.gov.cn/xwfb/xwfyrth/art/2026/art_1f25cb39adfa4561b34b4ea46d2bcee7.html
- 商务部(2026. 1. 7.). “商务部公告2026年第2号 公布对原产于日本的进口二氯二氢硅发起反倾销立案调查.”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a7609f764b354909892ae21c0d301cb7.html
- TIME(26.1.13), Amid China-Japan Spat, Both Countries Court South Korea
- Reuters(26.1.8), China says ban on exports of dual-use items to Japan to only hit military companies
- Reuters(26.1.13), G7, other allies discuss ways to reduce dependence on Chinese rare earths
- NKKEI Asia(26.1.9), China now curbs civilian-use rare-earth exports to Japan
- Rare Earth Exchanges(26.1.19,), China Tightens Rare Earth Export Reviews to Japan, Raising New Supply Chain Risk
- CSIS(2026.1.13.). China’s Rare Earth Campaign Against Japan
- Kyodo New(26.1.17), China tightens screening of Japan-bound rare earth exports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12.31.~2026.1.14.)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상무부, 군사사용자 및 군사 목적용 이중용도품목 對日 수출금지 발표(1.6.)

▶ (주요 내용) ▲ 일본 군사사용자 및 군사적 용도 ▲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1.6일부 공식 시행)

-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에게 법적 책임 부과

* 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으며,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동 수출금지를 시행한다고 언급(1.6.)

▶ (평가) 對日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절차 강화가 예상되나, 수출통제 조치의 실질적 파급효과는 향후 중국 당국의 구체적인 이행 수준과 집행 강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

- 구체적인 수출통제 품목 및 군사 사용자나 군사적 용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여지가 존재 / 수출통제 조치가 경고성 발언*에서 그칠지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수출통제 조치의 이행과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전망

*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군사적 용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2000년에 시행한 희토류 수출통제와 같은 전면적인 금지조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Bloomberg, 1.7.)

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Reuters(1.7.), Bloomberg(1.7.) 등

■ 美 행정부, 국가안보 명분으로 中 통제 기업의 美 반도체 인수 거래 제동(1.3.)

▶ (주요 내용) 美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 하이포(HieFo)와 엠코어(Emcore) 간 자산 인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표(1.2.) ※ 근거법령: 국방생산법(DPA) 721조

※ 하이포는 지난해 엠코어의 디지털 칩 사업부 및 웨이퍼 설계·제조 시설을 약 292만 달러에 인수하는 거래 체결('24.4월)

-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포가 중국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해당 거래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설명

- 동 명령은 하이포가 엠코어 관련 모든 자산을 18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지시

▶ (평가) 주요 언론은 이번 투자규제 결정이 수출통제와 더불어 美 정부가 中의 반도체 산업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

- 한편 미국의 對中 반도체 견제 전반 관련, 일각에서는 수출통제 품목인 엔비디아 GeForce RTX 5090이 중국에서 발견되는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출처: White House, Reuters, Wall Street Journal, 글로벌이코노믹(1.3.) 등

■ 트럼프 대통령, 이란 교역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25% 관세 부과 선언(1.12.)

- ▶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6.1.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doing business) 모든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대응 차원에서 경제적 제재 외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 정부를 강하게 압박
 - 이번 조치는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자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2차 제재' 성격도 있으며, 인도, 튜르키예, UAE 등도 사정권
- ▶ (평가) 미중 무역 휴전을 뒤흔들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전망
 - 이번 25% 관세 실제 시행 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45%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선적한 원유의 80% 이상(하루 평균 138만 배럴)을 수입하는 중국의 원유 공급망에도 영향 가능
 - 기존의 제재 등으로 대이란 교역 규모가 축소된 한국에('25.1~11. 1억 3,038만 달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2차 제재 적용 범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 존재
 - 다만 백악관의 공식 문서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발표된 상황으로 실제 적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사용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변수 /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

출처: Truth Social, SupplyChainDive.com, 매일경제, 국민일보, CNN, Reuters 등

■ 중국 정부,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제한적 승인 전망(1.14.)

- ▶ (주요 내용) 美 매체, 中 정부가 H200 칩 구매 승인을 대학 연구개발(R&D) 등 필요한 경우로 제한 통보 보도
 - 언론에 따르면 中 정부가 H200칩 구매 승인 관련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들에게 통보 / 단,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허용 범위 등은 未제시
 - 한편,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H200의 대중국 수출 규칙 개정 절차* 마무리
 - * 관련하여, '고급 컴퓨팅 상품에 대한 개정 허가심사 정책' 개재(1.13.) / 15일 정식 관보 게재 예정
 - 美 상무부의 개정 정책은 엔비디아 H200 칩과 동급 및 하위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심사 정책을 기준 '거부 추정' 방식에서 '사례 심사' 방식으로 전환
- ▶ (평가) 최첨단 칩을 활용한 AI 개발보다 자국 반도체 기업(화웨이, 캠브리콘 등) 및 산업 보호에 더 방점을 둔 조치로 평가
 - 일각에서는, 中 당국의 모호한 지침은 향후 미·중 관계 개선시 중국 정부가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도 상존

출처: The information(1.13.), 연합뉴스(1.14.) 등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25.12.26.	[구리]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 ▲ 미국 구리 4.96% 상승 ▲ 상하이 구리 3.33% 상승 / 톤당 10.138만 위안 도달
	'25.12.27.	[식량] 상무부, 수입 소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발표 : (주요내용) 국가별 할당량 초과물량에 대하여 관세 55% 부과
	'25.12.27.	[데이터] 국가데이터국, '데이터 과학기술 혁신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 발표 : (주요내용) '27년까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30년까지 데이터 기술 세계 선도 수준으로 발전
	'25.12.29.	[무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외무역법' 개정안 통과 : (주요 개정내용) ▲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입법 목적에 명시 ▲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 자식재산권 보호 ▲ 반제재조치 및 무역조정 지원제도 ▲ 법적책임 강화 등
	'25.12.31.	[무역] 리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 국경 간 무역 편리화 특별 행동 확대 이행을 위한 조치 제시
	1.1.	[무역] '25.1~11월 일대일로 국가서 무역흑자 45% 확보 : 전체 무역흑자의 45% 해당
	1.1.	[AI] 국가 주도로 자율형 AI 시스템 공식 가동 : 美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출범에 대응해 AI 주도권 확보 의지로 해석
	1.5.	[환경] 상무부, 국가발개위 등 9개 부처, '녹색소비 촉진 행동 시행 통지' 발표 : 가전·가구, 자동차 등 7가지 방면 20개 구체적 조치 제시
	1.6.	[수출통제] 상무부, 對日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 발표 :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하여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
	1.8.	[반덤핑] 상무부,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CS, 반도체 칩 제조 공정 중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 발표
	1.8.	[AI]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 'AI+제조 특별행동 시행의견' 발표 : (주요내용) '27년까지 ▲ 제조업 범용 빅모델 3~5개 육성 ▲ 산업별 빅모델 육성 ▲ 산업 분야 고품질 데이터셋 100개 조성 ▲ 대표 활용사례 500건 보급 등
	1.8.	[항공] 정부, 세계최대 정유업체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중국항공연료그룹(CNAF) 간 합병 승인 : 항공유의 정제부터 공항 급유에 이르는 전 과정 수직계열화
	1.10.	[태양광] 재정부·국가세무총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부과세 환급 4.1일부로 폐지 발표 : 中 태양광산업협회, 과도한 저가경쟁 억제 및 무역마찰 감소 예상
	1.11.	[산업] 상무업무회의, '26년 8개 핵심과제 제시 : ▲ 소비 진작 ▲ 시스템 개선 ▲ 무역 발전 ▲ 외자 유치 ▲ 개방플랫폼 활용 ▲ 대외투자 ▲ 양자·다자 협업 ▲ 리스크 방지 등
	1.12.	[전기차] 상무부, 中-EU 간 전기차 안전 협상 진전에 관한 공지 발표 : EU측이 '가격약속 신청 제출에 관한 지도문건'을 발표하기로 결정
	1.14.	[반도체] 정부,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제한적 승인 전망 : H200 칩 구매 승인 관련 지침을 일부 기술 기업들에게 통보

국가	일자	내용
미국	'25.12.31.	[반덤핑] 상무부, 이탈리아산 파스타 대상 반덤핑 관세율 대폭 인하(약 92% → 업체별 약 2~14%) 발표 : EU에 대한 상호관세(15%)에 추가로 부과
	'25.12.31.	[AI] 메타(Meta),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 인수 발표(WSJ)
	'25.12.31.	[관세] Trump 대통령,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 인상 조치 유예 발표 :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 인상 1년간 유예
	1.2.	[반덤핑]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한국산 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 한국 업체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을 0%로 최종 산정
	1.2.	[반도체] Trump 대통령, 국가안보 명분으로 中 기업의 美 반도체 인수 거래 제동 : 中 하이포(HieFo)의 美 엠코어(Emcore) 자산 인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표
	1.4.	[관세] Trump 대통령, 인도에 신규 관세 부과 가능성 위협 : Lindsey Graham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 대상 2차 관세 부과를 골자로 초당적으로 발의된 러시아 제재 법안의 조속 통과 희망
	1.5.	[항만] Trump 행정부, 심해 항만 인허가 절차 개편
	1.7.	[국제기구] Trump 행정부,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 *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환경 관련 기구 포함
	1.8.	[관세] Beth Van Duyne 세입위 소속 하원의원(공화/텍사스), 「2026 공정무역법」 발의 : (주요 내용) 기존 관세에 더하여 ▲대미 무역흑자국 상품에는 15% 관세 ▲대미 무역적자국 상품에는 10% 관세 부과
	1.8.	[무역] '25.10월 美 무역적자,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인 294억불 기록(Bloomberg·CNBC) : 전월대비 188억불(39%) 감소
	1.9.	[드론] 상무부, 中 드론 제한조치('24.9월 언급) 철회 발표 : 주요 언론은 對中 긴장 완화 신호라는 해석 제기
	1.11.	[Pax Silica] 카타르(1.12)와 UAE(1.15)의 Pax Silica 참여 보도(Reuters)
	1.12.	[관세] Trump 대통령, 對이란 교역국에 25% 관세 부과 발표 :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 관세 부과
	1.12.	[Pax Silica] Sergio Gor 주인도미국대사, Pax Silica 이니셔티브에 인도 초청 예정 언급 (Inside U.S. Trade)
	1.12.	[수출통제] 하원, '원격접근안보법(Remote Access Security Act)' 통과 : (주요 내용) 美 반도체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클라우드·네트워크를 통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수출통제로 규제
	1.12.	[관세] Trump 대통령, 이란 거래국에 25% 관세 부과 선언
	1.13.	[디지털] Darrel Issa(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및 Scott Fitzgerald(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 한국의 디지털 정책 완화 촉구(Inside U.S. Trade)
	1.13.	[핵심광물] 재무부 장관, G7+ 회의 통해 히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논의 주도
일본	'25.12.25.	[반덤핑] 재무성 및 경산성,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 대상 반덤핑관세 만료 재심 조사 개시

국가	일자	내용
일본	'25.12.26.	[정보보호]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안보상 기밀이 가장 높은 정보(방위, 외교, 스파이방지, 테러방지)에 대한 정보 보호 및 보안 클리어런스 조치
	'25.12.26.	[정보보호]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중요 경제기반 보호 정보(경제 기술, 인프라, 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 클리어런스 조치
	1.9.	[일미관계] 일본-미국 전략적 투자 관련 협의위원회 각료급 회의 개최(1.7. 및 1.9.) : 양국 투자 이니셔티브 제1호 안건 발표를 위한 의견교환 등 실시
	1.12.	[회토류] 회토류 국내 시추를 위한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 회토류 탐사선 출항(닛케이)
EU	1.1.	[탄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1.7.	[탄소] 집행위, 조세총국 홈페이지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수를 위한 안내자료 게재
	1.7.	[탄소]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 가이드라인 발표 : 회원국이 탄소중립기술 최종 제품 구매지원제도를 설계·개정할 때 준수해야 할 실무 가이드라인
	1.8.	[탄소]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27a조에 관한 질의응답 자료 홈페이지에 게재
	1.9.	[협정] 이사회, EU-메르코수르 협정 서명 승인 : 찬성 21개국, 반대 5개국, 기권 1개국으로 협정 서명 승인
	'25.12.15.	[반덤핑] 국경관리청, 철강 결속재 덤팡에 대한 예비판정 관련 덤팡 조사절차 종료 통보
	'25.12.22.	[반덤핑] 국경관리청, 유정용 강관에 대한 예비조사 완료 통보
캐나다	'25.12.24.	[반덤핑] 국경관리청, 한국산 콘크리트 강화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종료심사 종료 통보
	1.7.	[자동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자동차 산업 혜택 관련 언론보도(The Globe and Mail) : 캐나다 정부, 잠수함 사업 입찰과 연계해 한국에 현대차 캐나다 생산 거점 설립 및 독일에 폭스바겐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 요청
	1.9.	[대중관계] 카니 총리, 중국 공식 방문 예정 (1.13~1.17.) : 8년 만에 최초로 캐나다 총리 방중 예정
	1.10.	[정책] 캐나다 우선구매 정책 의무 강화('26년~) : ▲연방정부 조달 적용대상 확대 ▲캐나다산 소재 사용 의무 강화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 도입 ▲상호 조달 정책 전면 시행 등
호주	1.12.	[핵심광물] 핵심광물 전략비축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발표 : (주요 내용) 첫 번째 중점 대상 광물로 안티몬, 갈륨, 회토류 지정 등
	1.13.	[핵심광물] '25년 호주 내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 130개(전년 대비 11개 증가), 추정 사업비 합계 약 190억 호불(전년 대비 약 10억 호불 감소) 기록
독일	1.10.	[핵심인프라] 독일산업협회(BDI), 핵심인프라 보호 강화 촉구(Spiegel)
핀란드	'25.12.29.	[조선] 핀란드 조선업체 라우마 마린 컨스트럭션, 미국 해안경비대와 쇄빙선 2척 건조 계약 체결 : 핀란드 라우마 조선소에서 중형 쇄빙선 2척 건조 예정 / 2028년 완공 예정
	'25.12.31.	[해저케이블] 핀란드 해저 통신케이블 훼손 사고 발생 : 경찰, 해저 통신케이블 훼손 의혹으로 러시아 화물선 나포

국가	일자	내용
브라질	1.6.	[철광석] '25년도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전년 대비 7.1% 증가한 4.1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1.9.	[협정] 메르코수르-EU 파트너십 협정 승인
인도	'25.12.29.	[산업] '25년 11월 기준 인도 산업생산지수, 25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The Hindu) :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 / 제조업(+8.0%), 인프라·건설(+12.1%), 자본재(+10.4%) 등
	1.4.	[전기차]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개편 이후 고급차 시장서 전기차 비중 하락(Business Standard) : 인도 정부의 상품·서비스세 개편(GST 2.0) 시행 이후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 약 2~3%p 감소
	1.7.	[자동차] '25년 인도산 자동차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Economic Times) :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 수요 확대 등 기인
인도네시아	1.8.	[대중관계] 재무부, 중국 기업의 정부 입찰 제한 완화 검토(The Hindu)
	1.8.	[니켈] 광업부 장관, '26년 니켈 생산 쿼터 감축 예고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미국	'25.12.30.	[석탄] 에너지부, 콜로라도주 Craig 석탄발전소 설비 가능 상태 유지 명령
	1.3.	[석유] 미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 적을 것으로 평가되나 글로벌 원유 공급 질서 개편 가능성 제기
	1.7.	[석유] Trump 대통령 및 참모진, ▲중·러 견제 및 ▲美 소비자 대상 유가 인하를 목표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기간 장악 구상 추진 중(WSJ)
	1.11.	[석유] Trump 대통령, 쿠바로의 베네수엘라산 석유·자금 유입 차단 의지 강조(Truth Social)
캐나다	1.8.	[원자력] 온타리오주, 원자력 전력을 토론토로 보내는 수중 송전선에 15억 캐불 투자(The Globe and Mail)
호주	'25.12.22.	[가스] 정부, '26년 2분기 가스수출제한조치(ADGSM) 미발동 발표
호주	1.9.	[에너지·자원] 산업과학자원부, '24년-'25년 회계연도 호주 에너지·자원 수출액 전년 대비 7% 가량 감소
노르웨이	1.9.	[풍력]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의 美 뉴욕州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 재차 중단 : 에퀴노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베트남	1.7.	[원자력] 총리, 닉투언 원전 관련 신규 파트너 선정 등 지시

「경제안보 Review」 2026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6-1호 (2026.1.9)	분석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서 분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분석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통신문'주요 내용 및 분석	임산호
	현안	미국 국방수권법과 경제안보: 투자, 바이오, 조선, 공급망	최용호
26-2호 (2026.1.23)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개입과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화	유아름
	현안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경제협력 주요 성과	안수린
	현안	중국의 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